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 일시: 2021년 8월 2일 (월)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주최: 자유기업원 · 국회의원 윤창현 · 바른사회시민회의 · 한국대학생포럼 · 한반도선진화재단 · 국민노조

□ 사회: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 발표: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 토론: 이윤진 서원대학교 교수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세미나 진행 식순

시 간		내 용
1부 – 개회식		
14:00~14:10	소개	국민의례
		개회사 윤창현 / 국회의원(국민의힘)
		환영사 최승노 / 자유기업원 원장
		내빈소개
2부 - 발제 및 토론 (좌장 : 김인철 / 성균관대 명예교수)		
14:10~14:50	주제1	▪ 현행 경제정책이 청년고용 증진에 미치는 영향 -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2	▪ 노령사회와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복지 대책 - 김용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14:50~15:20	토론1	▪ 이윤진 /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2	▪ 김민수 / 창업전문가, 국민의힘 분당을 당협위원장
	토론3	▪ 이명재 /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15:20~15:40	자유토론	자유토론 및 폐회

[제1 발제]

현행 경제정책이 청년고용 증진에 미치는 영향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 과제
-일자리, 성장, 복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

현행 경제정책이 청년고용 증진에 미치는 영향

일시: 2021년 8월 2일(화) 오후 2시
장소: 자유기업원 회의실
발표: 양준모 연세대(경제학)

청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MZ 세대는 누구인가?

- 1990년대 생
- BTS: 김남준: 1994.09.12(27살), 김석진: 1992.12.04 (29살), 민윤기: 1993.03.09 (28살), 정호석: 1994.02.18 (27살), 박지민: 1995.10.13 (26살), 김태형: 1995.12.30 (26살), 전정국: 1997.09.01 (24살)
- 개인 수입 수령액: 48억 추정

1985년 생까지?

박나래, 새 프로필 공개 "55억 이태원 단독 주택 1순위 낙찰"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photo@newspim.com

▲1985년생 ▲서울과학고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컴퓨터과학 학사 ▲클라이스튜디오 대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바른정당 서울특별시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서울특별시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공정?

- 수시 확대 .
- 나는 가수다.
- 나는 00다.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광화문에서/황형준]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신속한 재판 이뤄져야

황형준 사회부 차장 입력 2021-07-19 03:00 수정 2021-07-19 03:02

수시입시의 문제: 학교장추천 vs. 학생의 학교 선택권

연합뉴스 |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코로나19 #백신 #올림픽 #김홍빈 #도쿄올림픽

뉴스홈 | 최신기사

'오디션 순위조작' PD, 징역 2년 확정(종합)

송고시간 | 2021-03-11 11:28

민경락 기자
기자 페이지

대한민국의 시간표

2020년 인구감소
- 출산율: 0.84

2020년 국가채무 급증
- 1차 경계선 40% 추월

2024년 국가채무 급증 지속
- 2차 경계선 60% 추월

2030년
- 총부양비 53.0%
- 노년부양비 38.2%

2035년
- 사학연금 적자 전환

2039년 (2041년, 4차 재정)
- 국민연금 적자 전환

2051년
- 사학연금 고갈

2054년 (2057년, 4차재정)
- 국민연금 고갈

2067년
- 총부양비 120.2%
- 노년부양비 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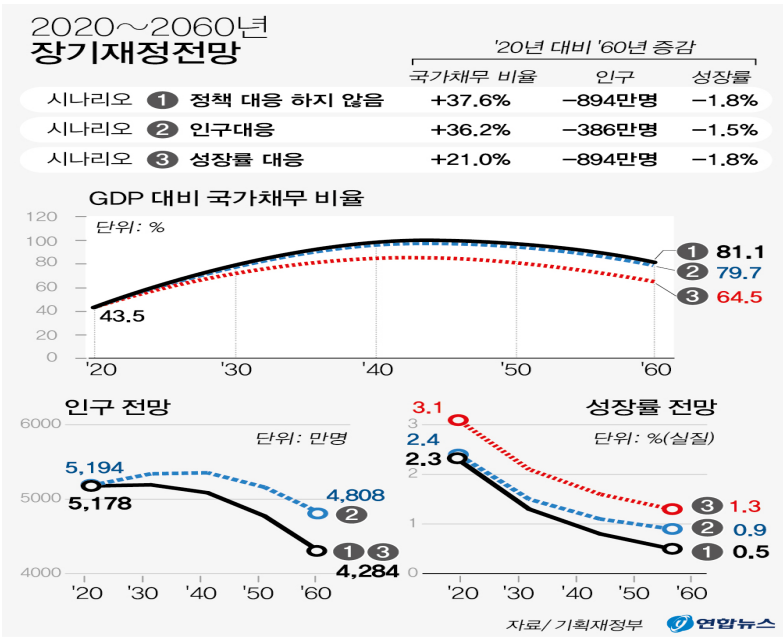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빚 내서 지금 쓰자.

우리나라 장기재정전망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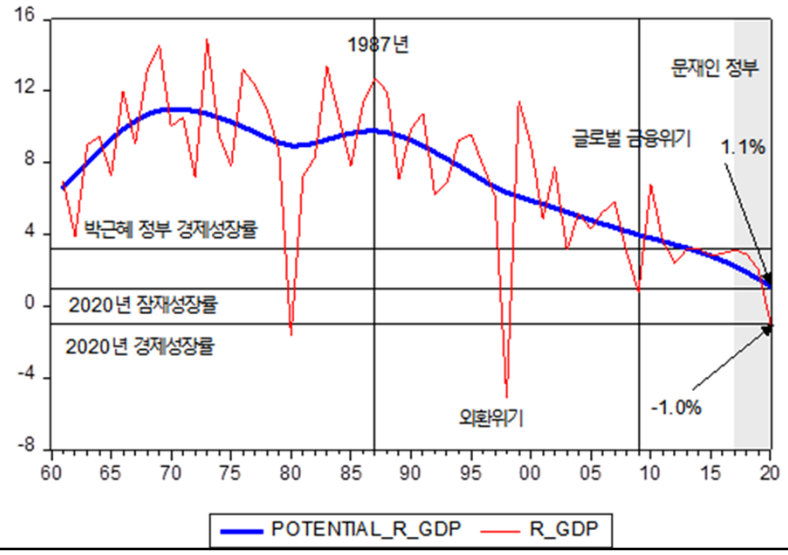
1. 재정파탄까지 20년 남았다?
2. 20년 뒤에 빚 잔치할 국가의 국채는 누가 사는가?
3. 2035년부터 사학연금 적자재정으로 국채를 팔아야
4. 2039년 (2041년)부터 국민연금 적자재정으로 국채를 팔아야.
5. 2051년 사학연금 고갈 (재정 투입?)
6. 2057년 국민연금 고갈 (재정투입?)

문재인 정부는 계획이 있는가?



박영석 기자 / 20200902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무엇이 문제인가?



국세수입증가분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다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 재정수입	481.8	470.7	483.0	505.4	527.8	552.2	3.5
(증가율)	(1.2)	(△1.1)	(0.3)	(4.6)	(4.4)	(4.6)	
○ 국세수입	292.0	279.7	282.8	296.5	310.1	325.5	2.8
○ 세외수입	27.9	29.1	28.6	28.9	29.9	30.2	2.0
○ 기금수입	161.9	161.9	171.6	180.0	187.8	196.6	5.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지출은 급증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20년* 본예산	'20년* 추경**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512.3	546.9	555.8	589.1	615.7	640.3	5.7
① 예산·기금별 구분							
○ 예산지출	351.1	374.1	370.9	394.8	411.3	423.8	4.8
(비중)	(68.5)	(68.4)	(66.7)	(67.0)	(66.8)	(66.2)	
○ 기금지출	161.1	172.8	184.9	194.3	204.4	216.5	7.7
(비중)	(31.5)	(31.6)	(33.3)	(33.0)	(33.2)	(33.8)	
② 지출성격별 구분							
○ 의무지출	255.6	255.1	267.3	282.5	295.7	314.2	5.3
(비중)	(49.9)	(46.7)	(48.1)	(48.0)	(48.0)	(49.1)	
○ 재량지출	256.6	291.8	288.5	306.6	320.0	326.1	6.2
(비중)	(50.1)	(53.3)	(51.9)	(52.0)	(52.0)	(50.9)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20년* 본예산	'20년* 추경**	'21년	'22년	'23년	'24년	연평균 증가율
▪ 복지분야 법정지출	119.7	123.2	131.5	139.9	148.8	160.6	7.6
▪ 지방이전재원	111.6	107.8	108.7	113.9	117.2	122.9	2.4
▪ 이자지출	17.0	16.9	19.3	21.1	22.4	23.3	8.2
▪ 기타 의무지출	7.4	7.2	7.7	7.7	7.4	7.4	0.0

* 국회 확정예산 기준 / ** 3차 추경 기준

우리나라 2020년 총지출 513.5조 원, 국가채무증가
64.7조 원, 국가채무 의존도 12.6%

효과없는 정책들

탁상공론의 백과사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1

청년 일자리대책 (2018.3.15.)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 청년들을 중소기업 일자리로 유인.

-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창업 활성화
-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즉시 취·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추진
-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분야에서의 구조적 과제 대응 지속 추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2

청년 주거지원 방안 (2018.7.5.)

-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 ~ 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기숙사 6만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 ~ 80%로 임대
-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3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7.17.)

-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고(1,300→1,600억원),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하여(최대 4,000만 원 지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하여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5만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
- 청년저축계좌 신설,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20년) 등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4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2020.8.5.)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 국무총리가 5년마다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실시-공표-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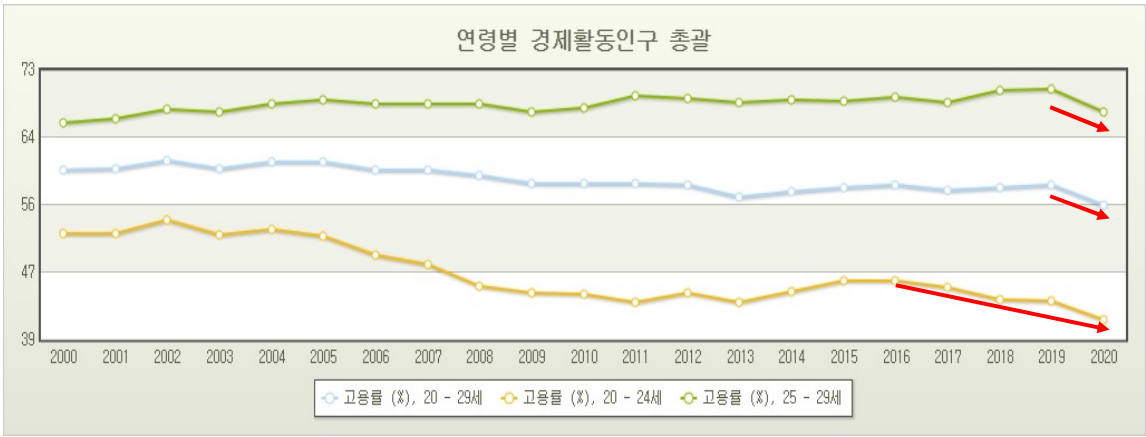
특징

1. 푼돈 지원
2. 선택된 청년들의 세상
3. 지원금으로 정부가 생색내지만 실상은 저임금 지속
4. 내가 살고 싶은 주택가격은 天井不知
5. 학자금 지원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펼쳐줄 교육이 중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의 결과

청년 고용률 하락, 왜?

청년고용률



출처: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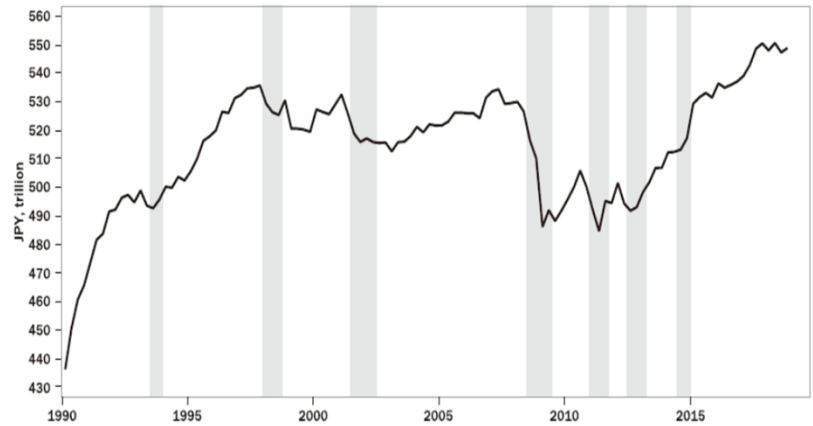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청년들의 비관적 미래

오래된 미래

일본의 경험

자산버블 붕괴
고령화
인구감소
관 중심의 경제 운영
정치 지도력 부재

일본의 명목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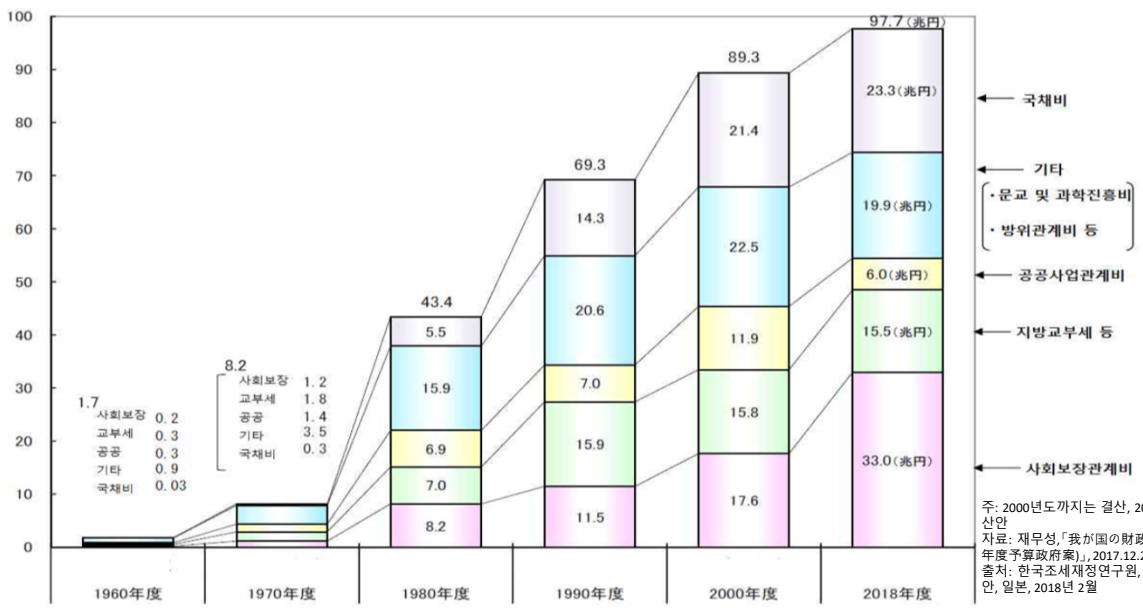


Source: Macrobond

민주당 집권기 2009-2012

- 아동수당 지급
  공립고교무상화
-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 미국기지 이전
- 최저임금의 시급은
  1천엔 인상
-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탄소배출량 감축

복지지출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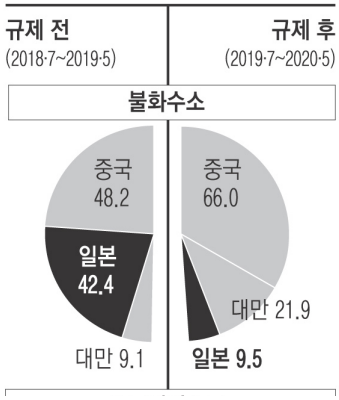
주: 2000년도까지는 결산, 2018년도는 예산안
자료: 재무성,「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12.22.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일본, 2018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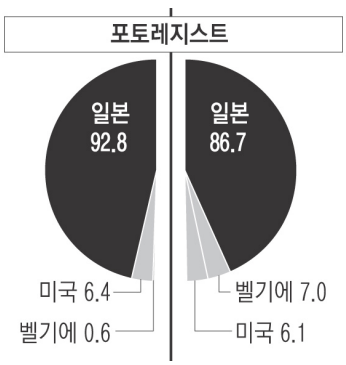
Tribal nationalism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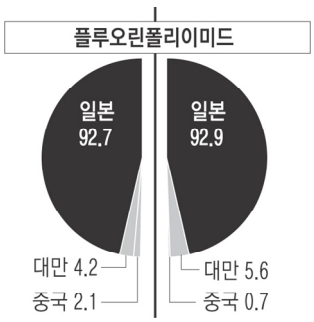
NAZI 당: The National Socialist German Workers' Party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한 이유가 국면전환?

일본 수출규제 전후
규제품목 수입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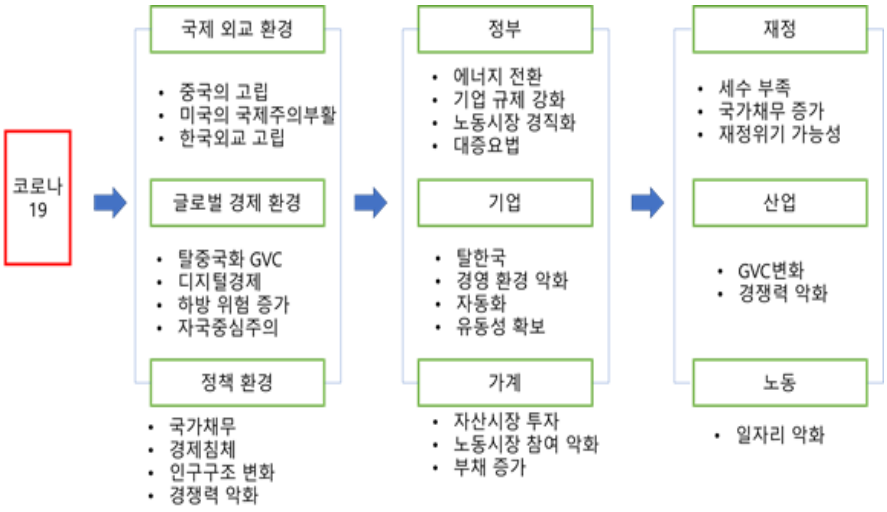
일본 수출규제 전후
대일 수입금액 변화

규제 전(2018·7~2019·5)	470억8865만달러
규제 후(2019·7~2020·5)	415억9885만달러 (−11.7%)

자료: 한국무역협회

출처: 경향비즈

코로나 19 이후 구조 변화



27

정책 개혁 방향

시대의 흐름을 읽자.

21세기 세계경제의 3가지 특성

상호 의존성	세계화와 기술발전, 그리고 GVC
속도	모든 것이 빠른 세상: 위기, 기술발전과 채택,금융시장, 그리고 코로나
복잡성	정보량, 상호의존성, 비선형성

출처: Klauss Schwab and Thierry Malleret, Covid-19: The great RESET, 2020, World Economic Forum

29

4차 산업혁명은 무엇?

1차 산업혁명	1760-1840: 철도건설과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19세기 말 – 20세기 초: 전기와 생산조립 라인
3차 산업혁명	1960년대 이후- :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4차 산업혁명	21세기- : 모바일 인터넷, 머신 러닝, AI 등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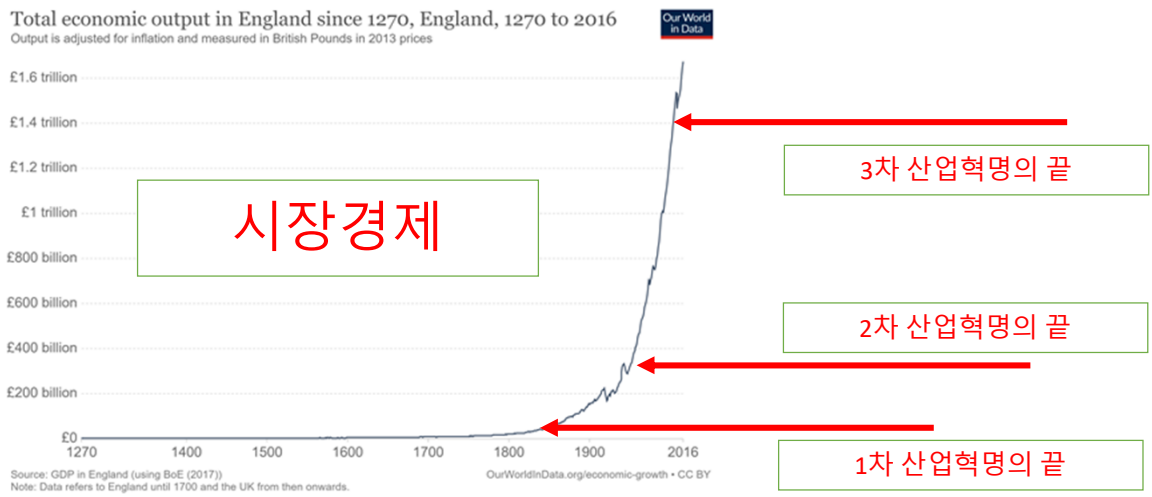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은 진행되고 있는가?

속도	삶의 빠른 변화
범위와 깊이	디지털 혁명과 융합으로 경제, 사회, 기업 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심지어 정체성도 변화
시스템 충격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변화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 기존 시스템의 붕괴
- 생산과 소비, 운송과 배달 시스템의 재편
-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 환경의 변화

31

빠른 변화의 동력



32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

노사관계 합리화 → 무기대등의 원칙
직장내 파업금지
대체근로
Employment at will → 일자리 증가
대기업 일자리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규제 완화 → 상생법 개혁
의료법 개혁
신산업 창출
규제완화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국제경쟁력 강화
일자리 증가
소득증가

교육과 진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계열화 사업 (영재 발굴과 학습 유인 방안)

첨단바이오 교육 계열화의 예시

초등학교
- 생태학습장
- 동물 놀이터

→

중학교
- 생물과 과학 실험실
- 학습장

→

고등학교
- 실험과 실습
- 동아리
- AP

→

대학교
- 수의대
- 보건
- 의료
- 자연과학

진로와 교육의 일관성 유지, 대학과 협력체제 구축

[제2 발제]

노령사회와 청년복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노령사회와 청년복지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시스템 개혁과제 토론회 발제 자료

김용하 (순천향대)

2021. 0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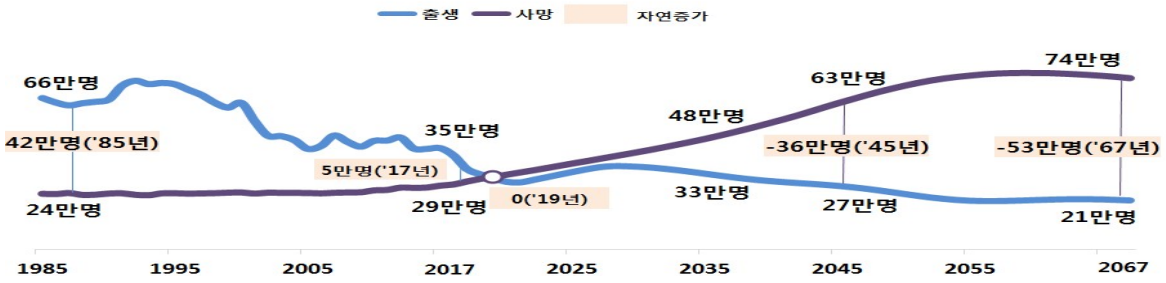
서 언

-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청장년층의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업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2019년 청년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일자리 창업관련 35조원, 주거지원 20조원, 교육훈련 19조원 등 이었음
- 청년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기조에 대한 큰 고민없이 투입된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궁극적인 청년복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함

2

인구의 급격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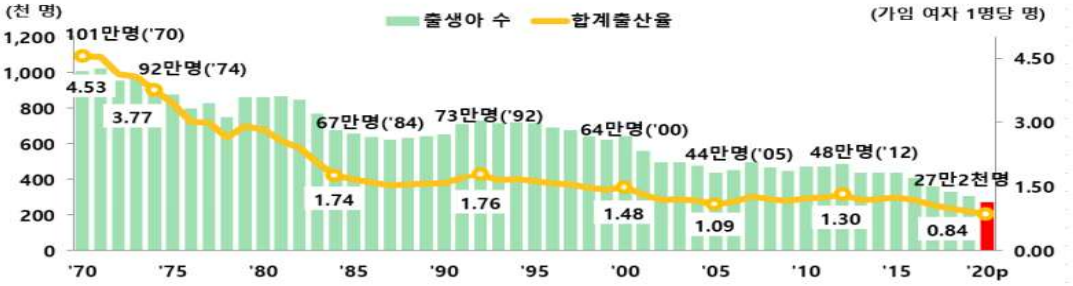
- ‘다산소사(多産少死)’에서 ‘소산다사(少産多死)’로의 인구전환으로 자연증가율 감소
  -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한 시기의 합계출산율 1960년 6.3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975년 이후 급감하여 1983년 인구 대체수준에서 ’05년 1.08명까지 감소, ’18년 0.98명, ‘20년 0.84으로 세계 최저수준 지속
  - 1970년 기대수명은 남성 58.7세, 여성 65.6세였으나 ’19년 현재 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급격하게 증가
  - 저출산, 저사망으로 인구성장률은 1970년 2.18%이었으나, ’20년 0.14%, ‘30년 -0.03%,2050년 -0.86%



인구의 급격한 변동

- 2017년 (출산율=1.05)에 이어 2018년 (출산율=0.98) 출생아 수 급격히 하락
- 2019년 저출생 현상 지속 (출산율=0.92)
- 2020년 저출생 지속 심화 (출산율= 0.84), 출생아수 27만명 수준으로

통계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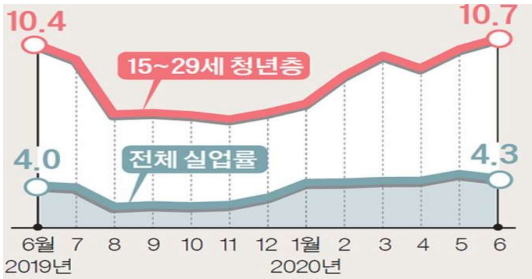
청년의 현재 : 청년 실업

감소하지 않는 청년실업률

- 전체 실업률 (4% 내외) 보다 2배정도 높은 10%대 청년 실업률
- 취업을 원하는 잠재구직자 포함 확장 실업률은 25% 내외의 실업률

자료: 국민일보 (2021.5.23)

청년 확장 실업률



청년의 미래 : 인구 부양부담 급속 증가

인구부양비율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할 총부양비는 2017년 37 최저점에 도달
- 2067년 120에 도달 전망 (노년부양비 : 102)
- 저부양비율기간 동안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국가적 정책과제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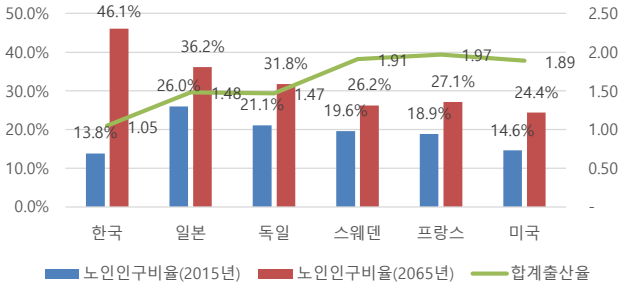
청년의 미래 : 고령사회 도래

OECD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
(2010년, OECD 국가)

-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 인구총량보다 인구구조가 중요함.

주요국의 2015년~2065년 노인인구비율 비교 (저출산 문제)

-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프랑스, 스웨덴 등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지만 2065년에 이르면 27%의 노인인구비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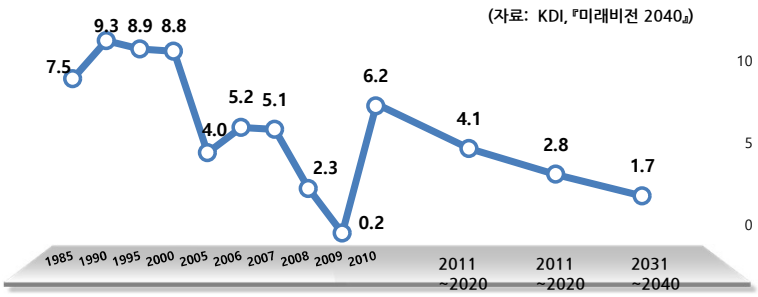


청년의 미래 : 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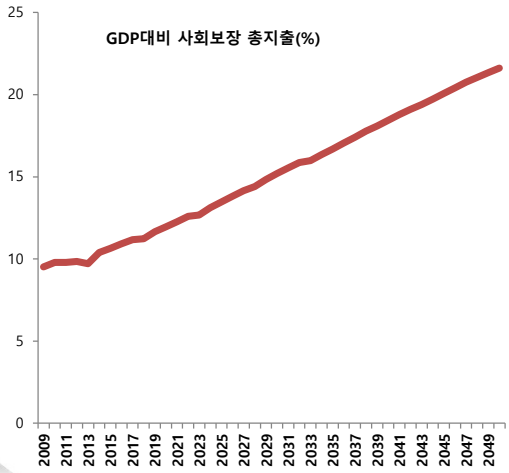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이 점차적으로 하향하여 현재 3%에서 ➔2% ➔1% 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인구를 주어진 변수로 볼 것이 아니라 통제가능한 변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KDI, 『미래비전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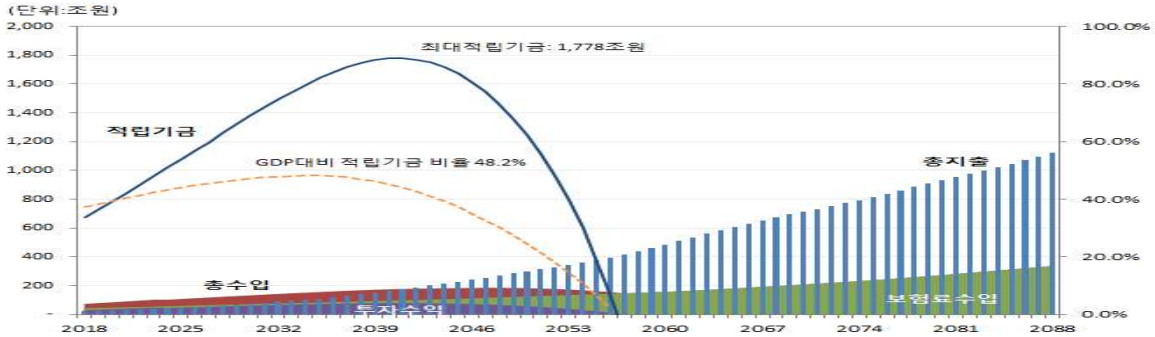


사회보장 재정전망



청년의 미래 : 국민연금 고갈

-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 : 적립기금 고갈 2060년➔2057년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 ✓ 향후 70년 (2018-2088년) 재정전망
- ✓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 중첩

청년의 미래 : 건강보험료 급상승

노인진료비 비중 전망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 급여지출 증가 ➔ 세대간 건강보험료 부담 차이

건강보험료 급속한 상승 전망

- 2018년 사회보장위원회 보건관련 지출 장기전망에 따르면, 2020년에는 GDP 대비 4.8%인 보건관련 지출이 2030년에는 7.1%, 2040년에는 9.7%, 2060년에는 13.6%수준으로 증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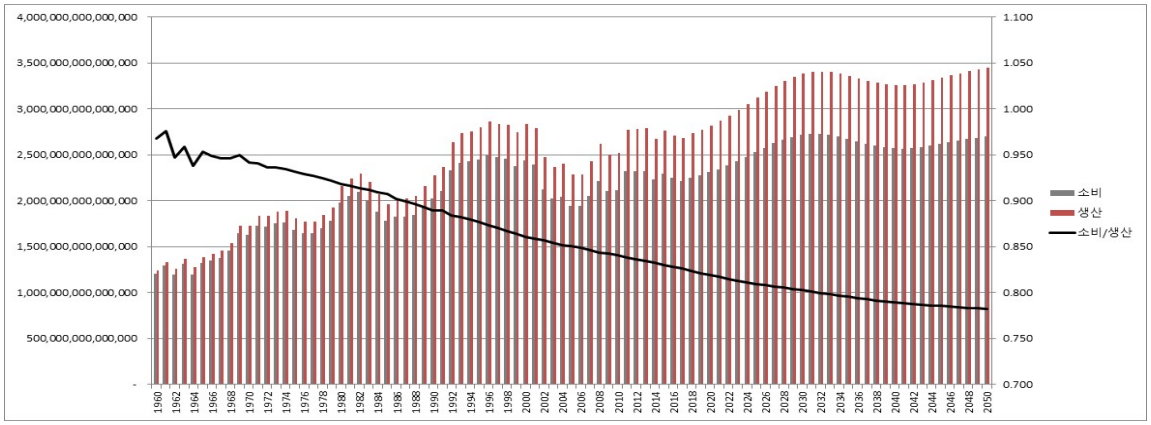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보험	당기수지	41,728	30,856	7,077	△1,778	△31,636	△27,275	△10,679	△16,877	△8,681
	누적수지	169,800	200,656	207,733	205,955	174,319	147,044	136,365	119,488	110,807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	909	△432	△3,293	△6,101	△1,686	△3,124	△4,033	△7,153	△10,866
	누적수지	23,524	23,092	19,799	13,698	12,012	8,888	4,855	△2,298	△13,164

주: 2018년까지는 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정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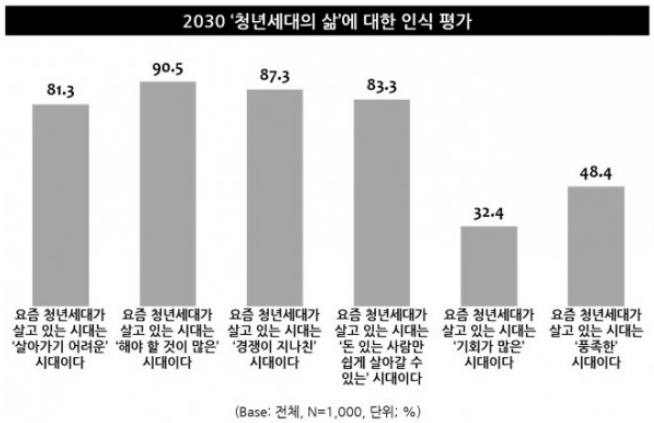
청년의 미래 : 부담은 커지고...

세대간 갈등과 균열 심화



청년정책의 현황

- 청년세대의 인식 평가



자료: 앰브레인 트렌트 모니터 (2021. 07.19)

현재 2030 청년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희망이 없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 전체 10명 중 8명(81.3%)이 요즘 청년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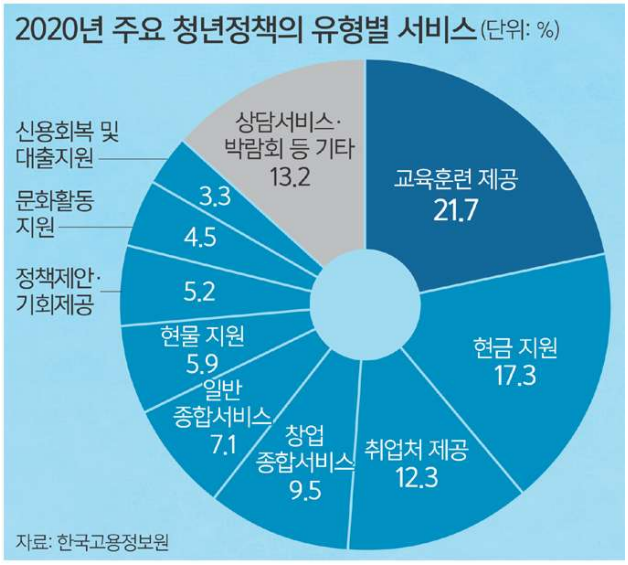
출처 :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

청년정책의 현황

- 청년정책의 유형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부처와 지자체는 지난 한 해 일자리(1790여개)와 금융생활지원(610여개), 교육·훈련(230여개), 주거지원(150여개) 등 3100여개 정책·사업을 펼쳐왔다.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일자리·창업 35조원, 주거지원 20조원, 교육·훈련 19조원 등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년정책의 현황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20

청년정책의 현황

-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채용 인센티브
청년창업 활성화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제공
미래 청년인력 양성
청년친화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고졸 특화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정책의 현황

-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문재인정부 청년정책은 크게 일자리, 생활·복지, 주거·금융 등
각 분야 별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취업정책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생활·복지정책으로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이 대표적
주거·금융정책에는 청년 전·월세대출, 청년희망두배통장 등

자료: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34세 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0만 명 대상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조기 취업 시 취업 성공금 50만원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진단·경로설정 참여수당 최대25만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6개월 간 월 최대 11.6만원 지급 3단계 청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 시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지급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5000만원이하, 전용면적 전용면적 60㎡(18.15py)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 :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보증금 1.8%, 월세 연 1.5%금리로 대출 가능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60㎡ 이하의 주택(동일 면적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 : 3500만원 한도로 전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 소득에 따라 연 1.8~2.7%의 금리를 적용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해 최대 1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저축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 기간 적립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 예를 들어 10만원을 3년 저금하게 되면 총 납입금은 360만원의 두 배인 72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
청년취업 인턴제	**미취업자 대상 정부가 임금의 전액, 일부 부담** • 인턴 기간 동안 매월 50~60만원 인건비 지급 • 인턴에게는 최저임금 110% 이상 약정임금 보장 •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정규직 전환금, 인턴에게는 취업지원금 지원

자료: 온라인 청년센터 [그래픽=박현정 기자]

청년정책의 현황

- 청년수당 : 전국 지자체 청년수당 도입

청년수당 도입 현황

지자체	사업명	지급액	명목	지급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6개월간 월 50만원	구직활동비·생활비	카드 발급 지원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6~10개월간 월 30만~50만원	구직활동비	카드 발급 지원
성남시	청년배당	분기별 25만원	무제한, 가맹점에서만 사용	상품권 사전지급
인천시	청년사회진출지원	3개월간 월 20만원	구직활동비, 취업성공수당	사후 실비정산
부산시	청년 디딤돌카드	6개월간 240만원, 월 최대 50만원	구직활동비	카드 발급 지원
광주시	광주 청년드림 수당	6개월간 월 40만원	구직활동비·생활비	현금 지원
창원시	청년 구직수당 지급	4개월간 월 30만원		상품권 사전지급
경상북도	경북 청년복지수당	중기 3개월 이상 취업시 연 100만원	여가 활용·자기계발	카드 발급 지원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3년간 360만원	구직활동비(근거자료 안받음)	포인트 지급

전국 주요 청년배당·수당 제도 (단위:원)

주관	사업명	예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150억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700억
	청년면접수당	150억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75억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18억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수당	15억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80억

자료: 한국경제 (2018. 06.25, 2019.4.19)

청년정책의 현황

- 청년수당 : 서울

서울시 청년수당·월세지원금 계획

청년수당

월 50만원씩 총 6개월 지급
현재 연 7,000명 → 2020년 3만명 → 2021~2022년 연 3만5,000명으로 확대

월세지원금

월 20만 원 총 10개월 지급
2020년 5,000명 → 2021~2022년 연 2만명으로 확대

자료 : 서울시

서울시 '청년수당' 개요

대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주민등록 기준) 만 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
기준	장기 미취업·저소득층 청년 우선 선발(당초 중위 소득기준 자격 제한 수정)
기간	7월 신청자 접수 및 선발. 8월 이후 지급(최장 6개월간 지급)
지급 방법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 지급(최소 사회참여활동비)
기타	활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 상실시 지급 중단

자료: 한국경제 (2018. 06.25)

청년정책의 현황

-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 경기도

경기도는 당초 시·군과 6대4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시·군이 난색을 보이자 7대3(경기도 1227억원, 31개 시·군 526억원)으로 도비 부담 비율을 늘렸음
4년 동안 모두 68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

자료: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

- 대선공약 :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공약

전 국민 기본소득

- 연 **100만원**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 2023년 **1인당 25만원** 1회 지급 ➢ 2027년 연 4회에 걸쳐 **100만원** 지급

청년 기본소득

- 19~29세 청년 700만명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 지급(*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 + 청년 기본소득 100만원= 연 **200만원** 지급)

재원

- 자연 증가분,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 **25조원** 확보
- 기존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확보
-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 국민 공감대 형성 후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기본소득 소요예산 재원조달

	초기	중기	장기
지급액(월)	4만 1600원	8만 3000원	50만 원
지급대상	전 국민	전 국민	전 국민
재정	25조 원	50조 원	
재원마련 방식	일반회계예산 조정	일반회계예산 조정	일반회계예산 조정
		조세감면 축소	조세감면 축소
			기본소득목적세
		국토보유세	국토보유세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청년정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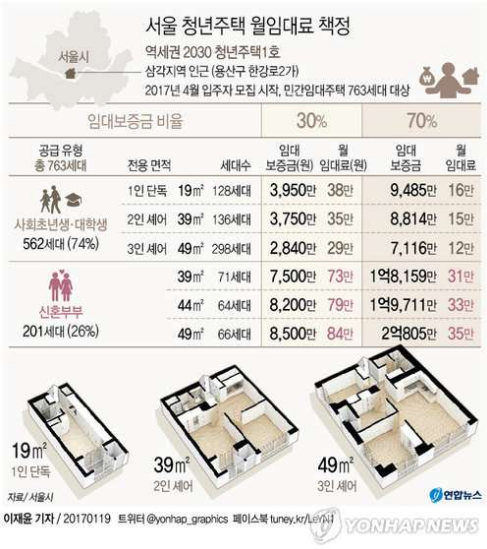
- 청년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현황

구분	사업장(개)	공급규모(가구)
준공	13	5532
사업인가 완료	75	2만3466
사업인가 진행	69	2만7353

※4월 기준 자료: 서울시

현재 75개 단지(2만3466가구)가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 교통체증과 자녀 통학 안전 등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으로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곳이 상당수



청년정책 평가

- 전국 지자체 청년정책 예산 (울산 전남 전북 순서)

구분	인구			예산		
	총인구	청년인구	청년인구 비율(%)	총예산 (백만원/일반회계기준)	청년예산 (백만원)	청년예산 비율(%)
서울	9,729,107	2,294,143	23.6	27,195,566	505,233	1.86
부산	3,413,841	666,000	19.5	13,780,500	97,383	0.71
대구	2,438,031	490,926	20.1	10,103,900	79,474	0.79
인천	2,957,026	630,929	21.3	11,920,600	68,067	0.57
광주	1,456,468	312,150	21.4	5,712,377	45,834	0.80
대전	1,474,870	323,660	21.9	6,782,700	46,440	0.68
울산	1,148,019	232,783	20.3	4,406,400	330,327	7.50
세종	340,575	65,495	19.2	1,760,300	26,224	1.49
경기	13,239,666	2,787,377	21.1	31,737,700	427,555	1.35
강원	1,541,502	275,448	17.9	7,443,500	59,655	0.80
충북	1,600,007	309,003	19.3	5,105,885	101,549	1.99
충남	2,123,709	393,552	18.5	7,783,600	81,911	1.05
전북	1,818,917	322,705	17.7	7,826,200	247,236	3.16
전남	1,868,745	311,360	17.7	9,305,100	310,915	3.34
경북	2,665,836	458,967	17.2	10,893,600	177,630	1.63
경남	3,362,553	606,292	18.0	9,999,400	183,933	1.84
제주	670,989	126,109	18.8	6,758,100	66,131	0.98

청년정책 평가

- 청년정책 진단 결과

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층의 사업 수혜율은 1.95%(하), 만족도는 58.33%(하)에 불과해 정책 효율성은 '중하'로 평가. 만족도가 77.78%(중상)인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행복주택)의 정책 효율성은 '중상'으로 평가

2020년 청년정책 주요 사업별 정책 실효성 진단 결과

구분	과제명	자원투입	충분성	효과성	효율성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상		상	중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상		상	중상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비예산		중하	중상
교육·훈련	국가장학금 확대	중상		상	상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중상		상	상
주거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중하		하	중하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중하		중상	중상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중하		하	중상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

- 청년정책, 효과성 부재

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층의 사업 수혜율은 1.95%(하), 만족도는 58.33%(하)에 불과해 정책 효율성은 '중하'로 평가. 만족도가 77.78%(중상)인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행복주택)의 정책 효율성은 '중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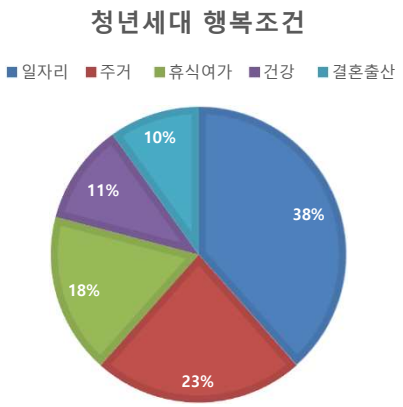
청년정책 영역별 청년 실태 추이

	지표	2000	2009	2019년
일자리	청년(19~34세) 실업률(%)	6.4	6.4	7.1
	전체 비정규직 중 20~29세 비중(%)	-	16.8	18.2
교육·훈련	학자금 대출 1000건당 체납 건수(건)	-	6	17
주거	청년(19~34세)단독 월세 비중(%)	-	68.7	71.7
	청년(19~34세)단독 임대료 과부담가구 비율(%)	-	35.3	35.4
참여·활동	국회의원 당선인 20~30대 비중(%)	5.1	2.3	1.0
복지·생활안정	25~34세 청년빈곤율(%)	-	7.8	5.8

청년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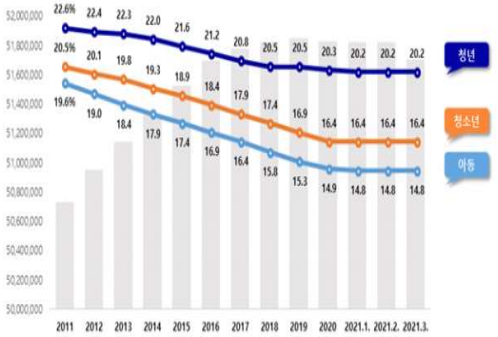
- 20대 청년세대 행복 조건

일자리 : 35%
주거 : 21%
휴식여가 : 16%
건강 : 10%
결혼 출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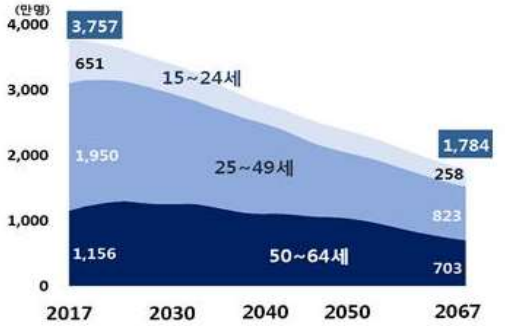


청년 실업 해결

- 청년 인구비중의 감소 추이와 전망



자료: 경북제일신보, 2021.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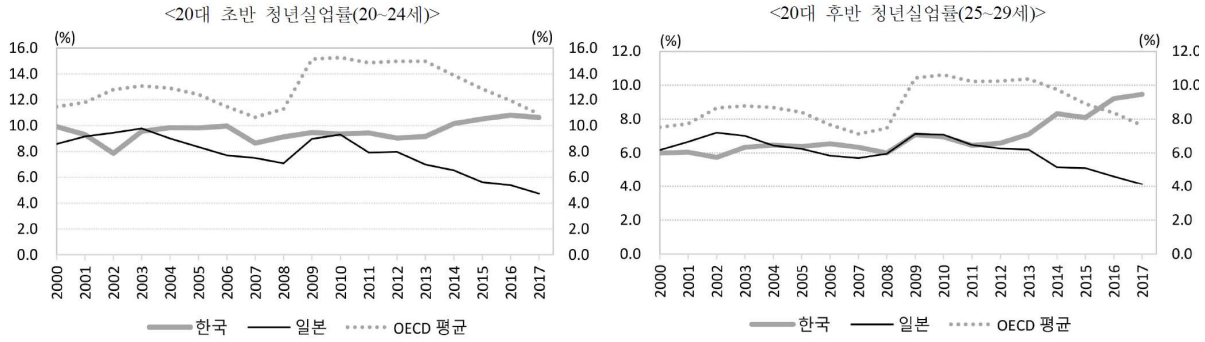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 15-24세 인구 : 2017년 651만명에서 2067년 258만명으로 감소

청년 실업 해결

- 일본의 청년실업률 획기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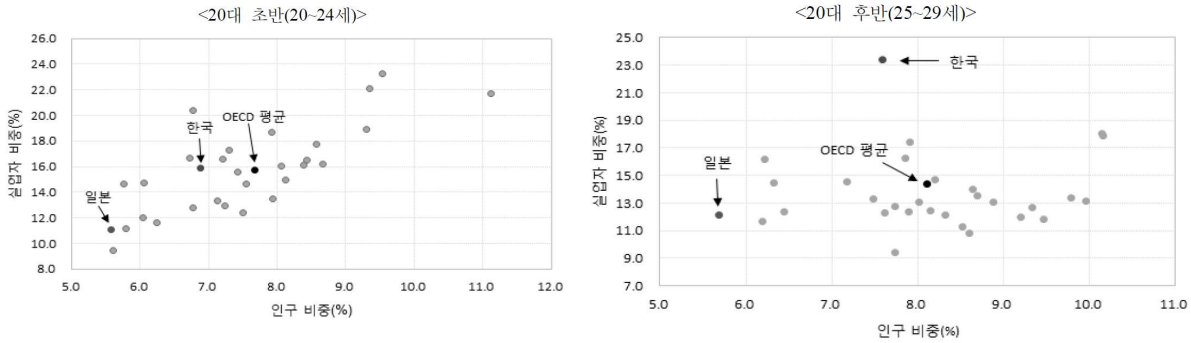


자료: 박상준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5권 제4호 2019. 12

✓ 일본의 청년실업률 감소

청년 실업 해결

- 일본의 청년실업률 획기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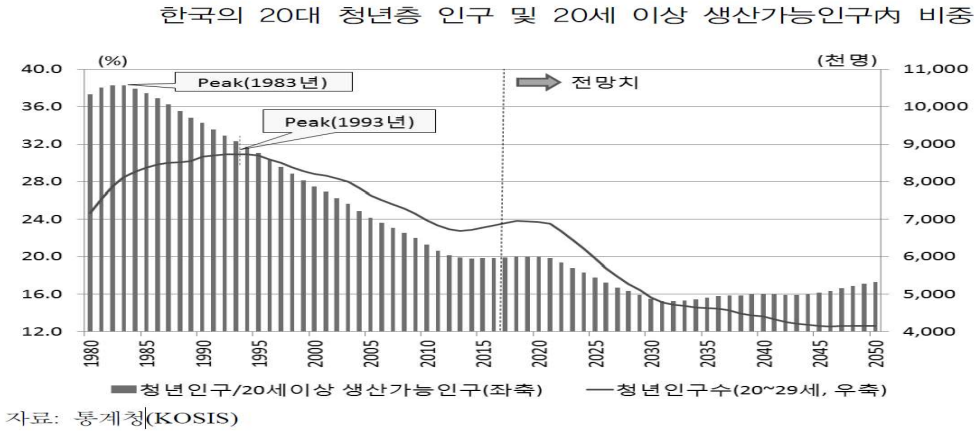


자료: 박상준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5권 제4호 2019. 12

✓ 일본의 청년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

청년 실업 해결

- 한국의 청년실업률 감소 가능성



자료: 박상준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5권 제4호 201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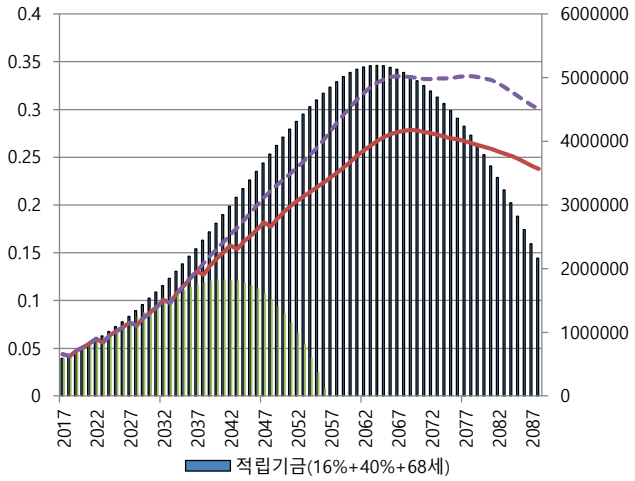
청년 실업 해결

-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은 청년실업 해소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 KDI,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 2020. 05.14)

2030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 국민연금 개혁으로 적립기금 고갈연도 2057년 ➔ 2096년



- ✓ 연금급여율 현행 유지, 연금보험료율 16%(2040년)까지 단계 인상
- ✓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 ✓ 2096년 적립기금 소진 (17%로 인상하면, 2102년 기금 소진)
-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26.3% , 2080년 26.0%

2030세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개편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 최고수준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는 2020년 10.4조원
- ✓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2030 세대의 박탈감
- ✓ 청년복지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대상 중심
- ✓ 중간계층 가족단위 소득과 자산 이전 원활히

결 언

- 현재 청년관련 정책은 일자리 1790개, 금융생활지원 610여개 교육훈련 230개, 주거지원이 150개 등이 있으나 정책 평가의 결과는 양호하지 않음
- 궁극적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descent job) 이라고 할 수 있고, 이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의 제고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노동 수급구조는 향후 5년~10년내 저출생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노동 공급인력의 감소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청년실업 해소 때 까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현재의 청년층이 노년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연금 위기를 대비한 연금개혁이 현 세대가 해야 할 책무임
- 가족중심의 세대간 소득 및 재산 이전의 원활화를 위한 증여세 및 상속세 인하가 필요함

32

[제1 토론]

토론문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문>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윤진

1. 노령사회와 청년복지

- 최근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성장,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등의 문제와 맞물리는 경향이 있음
- 국민연금 기금 문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미래 역시 청년의 미래와 연관지어 생각하여야 할 영역임
- 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의 문제이자 청년의 미래 정책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러 정책이 난무하면서 그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청년기본소득 등 취업으로 이행기 까지의 현금 복지 및 주택 영역에서의 복지 등 일자리 이외의 여러 이슈도 탄생하고 있는 중임
- 향후 청년 정신 분야까지 살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됨(청년 고독사 등의 문제)

2. 현행 경제 정책이 청년고용증진에 미치는 영향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결국 빛내서 현재를 살자라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 있어 복지 지출은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됨
- 하지만, 어느 곳에 어떠한 돈을 써야 하는지 우선 순위에 대한 조정은 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인상 완화, 시간제 일자리 강화, 유연한 고용 등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임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복지 지출이 무조건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 반드시 지양해야 함. 앞으로 어떠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청년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중지가 모아져야 할 시점으로 보임

[제2 토론]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MZ세대와 사회변혁에 대한 이해

김민수 국민의힘 분당구을 당협위원장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과제

: MZ세대와 사회변혁에 대한 이해

토 론 자 : 김 민 수

국민의힘 분당구을 당협위원장
(사)한국창업진흥협회 협회장

Ⅰ. MZ세대(인간 욕망의 진화와 사회변혁 속도>

MZ(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고민과 이들이 이뤄낼 사회변혁에 대하여, <인간 욕망의 진화와 사회변혁의 속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먼저 <인간 욕망의 진화> 측면에서 MZ세대를 이해하고자 한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인식 속에 다소 부정적인 단어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욕망은 인류의 삶과 사회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다. 욕망이란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것 즉, 결핍에 대한 강한 욕구**를 말한다. 절대 빈곤 상황은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만든다. 먼 곳을 빠르게 이동하고자 하는 욕망은 탈 것을 만들어 내게 한다. 자유를 억압받으면 자유를 욕망하게 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70 중후반~)는 태어나보니,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던 시대였다.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했다. 자식에게만큼은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다.

우리 부모님 세대(55세~70 초반)는 태어나 보니 절대적 빈곤, 배고픔은 어느 정도 충족된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 욕구를 넘어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 그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더 잘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그러하듯 자신만의 생존법을 자식들에게 교육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부모님 세대에서 확률적으로 높게, 남들보다 잘 살 방법이 공부였기 때문에 그토록 공부를 강조해 왔다.

우리 세대(30대 중반~ 40대 후반)와 MZ세대는 어떨까?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다. 도시에는 높은 빌딩이 가득하고, 사방팔방 쭉쭉 뻗은 도로, 세계 어디든 연결되는 전화망과 인터넷,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비행기, 안전한 치안,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까지 이미 모든 것이 태어나 보니 갖추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획기적인 과학 발전의 결과물인 스마트폰 사용에 쩔쩔맨다. 하지만, Z세대에게 스마트폰은 그저 태어나 보니 세상에 존재하고 있던, 세상의 일부일 뿐이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욕망은 가지지 못한 것에 있다. MZ세대는 그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갖추어져 있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 물질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없다. 대신 그들에게 없는 것,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보다 <진화된 욕망>이 존재할 뿐이다.

이 부분을 인정해야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고,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이해해야만 그들에게 잠재되어있는 넘치는 에너지를 인간의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시각과 미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망,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옷이 아닌,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줄 옷을 입고 싶은 욕망, 이동을 위한 단순 목적이 아닌 더욱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에 대한 욕망, 이를 뛰어넘어 탈 것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 추위와 동물의 공격을 막아줄 집이 아닌 더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넘어서 삶과 균형을 맞추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일거리(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 등. 열거한 것 외에도 MZ세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욕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MZ세대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진화된 욕망을 가진 세대이다. 이러한 욕구가 한심해 보이는가? 이런 욕구가 세속적이라고 느껴지는가? 아니다. 인간의 진화된 욕망은 인류의 삶을 발전시켰다. 진화된 욕망을 충족시켜 가는 과정에서 사회는 다시 한번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욕망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MZ세대는 자아실현과 맞닿은 고차원적인 욕망까지 느끼고 있는데, 정작 현실은 획일화된 교육,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끊임없는 경쟁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푼돈 몇 푼을 주며 "이만하면 됐니? 이만하면 우리에게 표를 주겠니?"라고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수 없다. 청년들의 뜨거운 욕망을 한 푼 두 푼 적선을 통해서 표로 변환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욕망을 더 뜨거운 열정 에너지로 변환시켜야 한다.

MZ세대는 진보한 욕망, 자아실현에 대한 내면의 욕구를 가졌음에도 이와 배치되는 취업(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지나친 경쟁, 획일적인 평가 시스템 등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더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내면의 진짜 욕망을 이

룰 길이 없다. 이들의 진정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판을 깔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잠재되어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

두 가지의 욕구가 충돌하면, 대다수 인간은 더 원초적인 욕구에 충실하게 된다. MZ세대는 미래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구, 자기를 찾고 싶은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지만 현실은 먹고사는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진짜 욕구를 숨기고 급한 욕구만 해결하는 삶은 행복할 수 없다.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욕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청년을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엿보는 것이다. 청년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미래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다. 청년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 그들의 욕망에너지를 열정 에너지로 변환시켜낼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은 미래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것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변혁의 속도> 측면에서 MZ세대를 위한 개혁과제에 접근해보자. 인류사회에서 최초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불의 사용이다. 불을 발견하고 사용(몸을 지키거나, 고기를 굽는 등)하기 시작한 이후, 불로 그릇을 굽는 등, 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99만 년이다. 인간의 위대한 업적인 바퀴가 발명되고, 자동차가 발명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6천 년이다. 인류 역사는 아주 느린 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혁의 속도가 빨라졌고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문명과 과학기술의 혜택은 최근 100년 남짓의 시간 동안 이뤄진 것이다. 컴퓨터, 비행기, 고속열차, 초고층 건축기술, 인터넷, 모바일폰,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발명되고 진화되었다.

4차산업혁명은 여러 방식으로 정의된다. 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결국, 급진보하는 과학기술과 사람이 서로 교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의 교체는 더디다. 과학기술은 진보하는데 온갖 규제가 과학의 발목을 잡는다. 인간의 욕망이 진화하고 있는데 사회는 끊임없이 70년 전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가르치며 배우라고 한다. 미래가 아닌 과거를 보라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를 쫓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가 버린 미래의 잔상만 들여다보며 갑론을박 싸우고 있다.

미래에 더 가까운 세대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정치도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대비해 갈

수 있다.

Ⅱ. 미래를 맞이할 준비(장기적 단기적 관점)

앞서 언급한 내용(인간 욕망의 진화와 사회변혁의 속도)을 토대로, 개혁과제를 말해보고자 한다. 해법과 각론을 쉽게 단정 짓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화두는 던질 수 있다고 믿는다.

먼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필요한 개혁과제이다.

1) 교육체제의 완전 개혁이 필요하다. 미래 변화에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마다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그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야 삶의 만족과 동시에 사회 기여가 가능한지 스스로 사색하고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상대로 교육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교육의 기능과 영향력은 축소되어 갈 것이다.
2) 과학영재를 양성하고 발굴해야 한다. 앞으로 각국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을 누가 선도하느냐 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과학에 대한 교육 비중을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3) 산업구조의 완전 혁신이 필요하다.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고, 기업이 성과를 내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기적 관점으로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동 또는 근로라 불리는 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하는 행위가 자아실현과 맞닿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일하고 싶은 직장뿐 아니라 일하고 싶은 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거나 혹은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권이 기업의 권리(이익 추구 행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기업과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의 해법은 강화된 유니온, 노조 활동에 있지 않다. “내 일자리를 보호하라”, “내 임금을 더 올려라” 이것은 이미 산업시대의 전유물이자, 일부 특권층이 되어버린 자들을 위한 사익 활동이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개인이 발전하고 진화된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기업의 성장을 함께 견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론은 충분히 연구될 수 있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개혁과제이다.

1)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체제가 이분화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과 미래성장동력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이 엄연히 다른 영역임을 인지해야 한다. 두 영역 모

두를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실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 양질의 일자리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기존에 없던 직업군을 만들어 낼 수 있다.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군이자 미래성장동력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 대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로 나가 있는 국내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3)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나친 고용 경직성은 신규 고용창출을 막는 벽이 된다. 정서상, 법률상, 현실적으로 빠른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스웨덴 / 덴마크의 유연안전성 모델 등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4) 완전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업무성과는 근로시간과 연관되지 않는다. 주 40시간이나 52시간 등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적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적게 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터는 MZ세대의 욕망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5) 글로벌 문화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나 콘텐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재 그 자체가 경쟁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6) 기업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는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세율 인상을 통해 증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익 증진을 통해서 자연히 국고가 부유해지게 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또 다른 욕구를 충족할 시간이 할애되는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7) 교육과 기본소득을 연계하여야 한다. 적선형 기본소득이 아니다. 연간 25만 원 지원 이런 것을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없다. 이것은 1회 성 생계지원금 수준도 안 된다. 개인의 역량은 국가의 역량으로 이어진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기계발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8) 기업 주도로, 기업과 국가가 공동출자하고 근로자에게 경영 주체의 권한을 주는 사내 벤처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건전한 형태의 사내 벤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기업과 근로자 윈윈전략이 가능하다.
9)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푼돈을 지원하며 창업 전선에 뛰어들게 하고,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 성장할 수 있는 창업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급진보하는 과학기술, 방대한 데이터,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는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사회, 경제, 정치, 외교, 국

방) 예외 없이 빠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변혁의 시대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 청년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판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는 것, 여기에 미래가 있다. 그리고 선배세대의 더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있다.

Ⅲ. MZ세대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촉구

마지막으로 정치 또는 경제개혁과 별개로 우리당이 MZ세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을 올린다.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주인공인 콜필드는 낙제생이자 퇴학당한 문제아다. 콜필드가 마음속으로 꿈꾸는 것은 - "나는 수천 명의 아이가 뛰어노는 넓은 호밀밭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바보 같지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건 그거야."

부조리한 세상과 위선적인 기성세대에게 지쳐있던 문제아 콜필드의 꿈은 자신보다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의 힘이 청년세대에 대해 유념할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 잣대로 청년세대를 재단하지 말자.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이 약자이고 보호할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청년들은 콜필드처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강한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청년을 약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자 미래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믿어주어야 한다. 진심으로 믿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줄 수 있다.

둘째, 우리당이 청년세대를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실수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막아주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기댈 곳이 없다. 표 장사나 이해득실이 아닌 청년세대를 위한 진심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청년세대도 우리의 진심과 비전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제3 토론]

지금처럼 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대표

<지금처럼 해서는 도와줄 수 없다>

이명재 (한국대학생포럼)

선심성 보여주기 정책으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당장의 정책 수혜자의 만족을 높여줄지언정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일자리 정책은 세대나 대상을 특정해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굳이 청년세대를 위해 경제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선심성 정책으로 특정 대상을 기분 좋게 해주려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방전으로 해로운 것을 제거하자.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자. 첫째,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경우**. 둘째,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 굳이 또 추가하자면 셋째, **급여, 복지, 근무환경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경제활동을 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일(work)이란 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 일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당장에라도, 택배기사(쿠팡친구), 보험설계사(자산관리사, 금융전문가로 불림), 또는 일용직 노동 등이 있다. 이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것"이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직업군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정책: 기업활성화(시장활성화), 인턴십, 견습생, 직장훈련,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늘리기 등 (파킨슨의 법칙: 관료조직의 비효율))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1단계 높은 고민인 것 같다. 특정 직군, 또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기업에 입사하기가 힘들 때 생기는 문제다.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높은 자격 수준을 요구하는 성공한 노동조합, 즉 협회가 생성한 진입장벽, 그리고 기업의 강성한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성한 진입장벽이다. 그러한 진입장벽이 1차적으로 일자리 수를 제한하고 구직자의 진입에 제동을 건다. 그럼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는 공석이 없거나 계속 줄어든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구직을 단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고 흔히 스펙이라 불리는 자격 및 입사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한다.

(정책: 교육훈련비 및 구직활동비 지원, 직장훈련기회, 기업의 인재영입을 위한 대외활동지원, 노동조합 및 노동자 편향적 법과 제도 삭제 (leave or take it), 다수의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은 다수의 경쟁자가 있는 것 등)

다음 단계로는 **급여, 복지, 근무환경이 맘에 들지 않아 일을 하지 않는 경우다.** 원하

던 원하지 않던 생계를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 일은 하는데 급여, 복지, 근무환경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하지만, 당장에 일을 그만두어도 이직할 자신이 없을 때 꾸역꾸역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 호소하는 것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상향, 노동시간규제, 각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규제, 실업급여 등이 있겠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사내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 일하기 싫으면 그곳을 떠나면 된다. 사내규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줘서도 안 된다. 근로자에게 외면 받은 기업은 스스로 망할 것이고 다수의 사용자는 경쟁을 통해 인재를 영입한다.

(정책: 각종 청년지원 정책, 청년기본소득, 청년행복주택, 청년대출, 청년목돈마련통장, 실업급여 등)

우리는 실업문제를 체감하고 있을까? 현재 실업자, 또는 구직단념자인 청년은 일이 없어서 못 한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청년층은 그만큼 생계가 힘들지 않은 것이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스스로 정하면 된다.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직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일이다.

일자리를 누가 만들 수 있나? 정치인은 일자리 공약을 내건다. 하지만 일자리는 정치인의 입으로 만들 수 없다.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또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인기 산업이나 업종에서 자연발생한다. 정치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본인 업무관련된 직원을 뽑을 때 밖에 없다. 물론 그들의 급여를 주는 모든 납세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또는, 간접적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서 더 많은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 물론 이때도 모든 납세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나는 공공부문, 공무원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나라가 망조에 들어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국가 성장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다른 청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세계무대에서 노는 기업을 통해 더 성장하고 자아실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다. 나와 같은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건강한 야망과 포부가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지 않을까 싶다.

(정책: 기업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재 노동자를 위한다고 실시하는 정책이 실제 그렇지 않다고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 등)